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목 차>

### 1.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인하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홍상준
	담당부서 (과)	서민금융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명순		연락처	02-2100-2612
	과장	하주식		이 메 일	hongguqaz@korea.kr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인하																		
	2.규제조문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제9조																		
	3.위임법령	대부업법 제8조 및 제15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7.8.7 ~ 8.22																
	6.검증단계																			
규제의 필요성	7.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제2금융권 및 대부업계의 고금리 신용대출 규모 증가로 금융이용 부담 경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최고이자율 인하를 통해 금융 부담을 경감해나갈 필요																		
	8.규제내용	<input type="checkbox"/> 대부업체 및 금융회사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 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연 100분의 24로 인하																		
	9. 피 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h>의견 수령방식</th><th>의견 내용</th></tr><tr><td>피규제자</td><td>대부업체 및 금융회사</td><td>-</td><td>입법예고</td><td>-</td></tr><tr><td>이해관계자</td><td>금융소비자 대부금융협회 금융감독원 등</td><td>-</td><td>입법예고</td><td>-</td></tr></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령방식	의견 내용	피규제자	대부업체 및 금융회사	-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금융소비자 대부금융협회 금융감독원 등	-	입법예고	-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령방식	의견 내용															
피규제자	대부업체 및 금융회사	-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금융소비자 대부금융협회 금융감독원 등	-	입법예고	-																
10.규제목표	<input type="checkbox"/>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금융이용 비용을 절감 및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에 따른 자금이용기회 증가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table><tr><td></td><td>비용</td><td>편익</td><td>순비용</td></tr><tr><td>피규제자</td><td>-</td><td>-</td><td>-</td></tr><tr><td>피규제자 이외</td><td>-</td><td>-</td><td>-</td></tr></table>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	-	-	피규제자 이외	-	-	-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	-	-																
피규제자 이외	-	-	-																	
12.영향평가 여부	<table><tr><td>기술영향평가</td><td>중기영향평가</td><td>경쟁영향평가</td></tr><tr><td>-</td><td>-</td><td>-</td></tr></table>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	-	-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	-	-																		
기타	13.일몰설 정 여부	-																		
	14.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																		
	15.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table><tr><td>적용여부</td><td>비용</td><td>편익</td><td>연간균등순비용</td></tr><tr><td>-</td><td>-</td><td>-</td><td>-</td></tr></table>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	-	-	-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	-	-	-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생 략)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현행과 같 음)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율” 이란 <u>연 100분의 34.9</u> 를 말한다.	② ----- ----- <u>연 100분의 24</u> -----.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 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u>연 100분의 34.9</u> 를 단리로 환산한다.	③ ----- ----- <u>연 100분의 24</u>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u>연 100분의 34.9</u> 를 말한다.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 ----- <u>연 100분의 24</u> -----.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 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u>연 100분의 34.9</u> 를 단리로 환산한다.	② ----- ----- <u>연 100분의 24</u>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u>연 100분의 34.9</u> 를 초과할 수 없다.	④ ----- ----- ----- ---. ----- <u>연 100분의 24</u>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제2금융권 및 대부업계의 고금리 신용대출 규모 증가\*로 금융이용 부담 경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 대부잔액(조원) : ('15.12말) 13.2 → ('16.12말) 14.6 (+10.6%)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조원) : ('15.12말) 6.5 → ('16.12말) 9.0 (+38.2%)

- 순이익을 시현하는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대부시장에 아직 일정수준의 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

⇒ 금융회사 등의 인하여력 및 저신용자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고이자율 인하를 통해 금융 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비교

####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최고이자율 현행 유지
	내용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연 100분의 27.9로 현행유지
규제대안1	대안명	최고이자율을 적정 인하
	내용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연 100분의 24로 인하
규제대안2	대안명	최고이자율을 대폭 인하
	내용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인하

####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 점	단 점
현행유지안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부여	·금융이용자의 고금리 이자부담
규제대안1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부여 ·대부업자,금융회사의 대응 여력 충분	-
규제대안2	·금융이용자의 금리 부담 최소화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가 줄어들 우려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증가가 우려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였고, 입법예고 절차를 통하여 대부업자등의 의견을 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금융이용자	시행령 입법예고로 의견 수렴	특이사항 없음
대부업자, 금융회사	시행령 입법예고로 의견 수렴	특이사항 없음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 제2금융권·대부업계 이용자의 금리부담 경감효과와 함께
- ❶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위축, ❷금융회사 건전성 영향, ❸일본 등과의 대부업 자금조달 비용 차이, ❹ 대부업 순이익 및 감내여력 등을 종합 고려할 필요
- ☐ 20%로 인하시, 금융회사·대부업자는 큰 폭의 수익성의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저신용자 등의 자금이용 기회가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
- 또한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건전성의 큰 폭 악화에 따른 금융시장 파급효과 우려
- ☐ 24%로 인하시, 이자부담 경감 효과 대비 저신용자 자금이용에 급격한 위축이 발생하지 않고,
- 금융권 건전성 악화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우려 등 시스템 리스크도 크지 않음
  - 또한, 최고금리 20%를 적용 중인 일본과 한국간 대부업자 등 간 조달비용에 차이(4~6%p)를 적정하게 반영한 대안
- ☐ 반면, 27.9%로 유지시, 가계 금리부담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움
- ⇒ 24%의 인하안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 3. 기대 효과

- ☐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 이용자의 고금리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 중·소형업체의 영업축소 가능성이 있으나, 대형업체 위주의 시장 재편으로 급격한 시장 위축 가능성은 제한적일 전망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규제목적)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 금융비용 부담 완화
- ☐ (규제수단)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위축, 금융회사 건전성 영향, 등을 감안하여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것으로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국제기준	일몰설정	원칙허용·
기술	경쟁	중기	규제설계	정합성	여부	예외금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 해외사례

- ☐ World Bank 분석에 따르면 76개 국가\*가 최고이자율 규제를 도입

\* 24개국은 절대 금리, 32개국은 벤치마크 등을 이용한 상대 금리를 적용

- 이자율 상한 제도는 서민계층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철수, 불법 대부업 증가, 대출상품의 다양성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으나,
- 대출이자율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어 많은 나라에서 제도 도입

□ (일본) '06년까지 대부업자 금리상한(29.2%,출자법)을 일반 금리상한(20%, 이식제한법)보다 높게 인정해 왔음

○ 경제불황 및 저금리 기조 지속, 다중채무자 문제 등으로 법정최고금리의 인하가 추진되어 '06.12월 20%로 일원화

- 다만, 20%로 인하시, 3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조정기간을 둠('06.12월 개정→ '10.6월 적용)

※ 그간 대부업자 최고금리(출자법)는 109.5%에서 '10.6월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 출자법상 금리상한: ('54)109.5 → ('83)73 → ('86)54.75 → ('91)40 → ('00)29.2 → ('10)20

○ 한편, 일수대출 등을 하는 전당포 영업자의 경우 상한금리가 109.5%로 유지

○ 타법사례

특이사항 없음

### III.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대부업자와 금융회사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경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대부업법 제19조제2항) 및 영업정지처분 부과 가능(대부업법 제13조제1항)하므로 피규제자의 비준수 가능성은 낮음

○ 규제 차등화 방안

□ 최고이자율은 원칙적으로 업권과 관계없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됨

## 2. 규제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 ☐ 최고이자율 제한은 기 존재하는 제도로써 추가적인 행정 및 인력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 재정적 집행가능성

- ☐ 예산사업 소요가 없고, 행정적 집행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지 않아 예산 소요 없음

##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 경감 가능성 및 시장추이 등을 감안시, 최고금리의 일부 인하 추진이 타당

-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통한 개정 추진

### 2. 향후 평가계획

- ☐ 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후 시장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조정 및 추가 인하 여부를 판단

### 3. 종합결론

- ☐ 저신용 서민 등의 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하여 최고금리는 24%로 인하 추진

- ☐ 최고금리 인하로 제2금융권 신용대출 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혁신이 촉진됨으로써,

- 금융소비자에게는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에 따른 자금이용기회가 증가하고 금융이용 비용이 절감되는 등 혜택이 기대